

시론

광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현재 광주시는 반도체, 데이터, 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 헬스케어, 광융합, 가전과 스마트 뿌리 등 9대 대표산업과 미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생 일자리 확산, 고용 기반 강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광주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15~30세에 이르는 광주 지역청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진로상담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주청년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의 재정지원으로 진행되는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며 지역청년의 진로탐색, 경력설계, 실천 취업준비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이행을 예방하고, 기업 내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신규 입직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광주청년일자리센터' 개소를 통해 취업준비와 진로고민에 지친 지역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청년카페' 공간으로 상무지구와 동명동 두 곳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은 "주거지원과 경제지원, 주요 정책들이 청년들이 많이 찾는 채널을 통해 홍보가 되길 바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덕분에 취업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한다"라고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고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재학생, 졸업생 등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대학-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일 경험 서비스 제공 등 각종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 광주시는 "재학생들이 꿈을 세우고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취업 전 초기 지원 역할을 담당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지역 내 청년 유관기관과 연계해 청년들의 성공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복합 취업지원 공간으로서 '광주청년일자리센터'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 마음회복 심리상담을 통해 지역청년 개인의 역량을 높여갈 수 있으며, 광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취감을 맛보며 안착할 수 있도록 광주청년일자리센터사업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광주청년일자리센터사업을 연계해 고용노동부, 광주시, 지역대학이 유기적으로 대학 입학, 역량 강화, 일 매칭, 경력설계 등 청년층의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해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정주형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제는 광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광주경제진흥생생일자리재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뿐만 아니라 창직(創職)이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품도록 소개하고, 그런 비전이 이뤄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청년칼럼

문턱을 넘어, 발판으로: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노진성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광주 동구가 청년들의 열정으로 혁신의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다. 2023년 말 동구의 청년 인구는 3년 전과 비교해 10% 증가한 3만 151명을 기록했다. 이는 동구의 진취적 청년 시책의 결과물이다.

동구 청년들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작년 급남로 AI 창업캠프에 73개 청년 AI 스타트업이 입주해 능력을 펼치고 있으며, 동구는 'AI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100여명의 젊은 예술가가 활동을 이어갔고, 10명은 국내외 저명한 예술제에 초청 받았다.

그러나 청년들 앞에는 여전히 난관이 존재한다. 통계청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세로 전환됐고, 청년 일자리 수는 감소했다. 2030대 '구직 단념자' 수도 매달 60만 명대를 유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전국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청년들은 이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청년들의 노력이 화답해야 한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 참여 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영역 각종 상설위원회에 30세 이하 청년을 20% 이상 의무 배정하고, 정기 '청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모든 정책 관련 위원회에 적용하고,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청년 교육 고도화'가 요구된다. '청년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AI, 문화 예술, 창업 등 특화된 심화 과정을 개설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추천 시스템'도 도입, 각 청년의 관심사와 자질에 부합하는 최적의 교육 과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혁신적인 청년 공간' 조성을 주장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동구 청년 혁신 센터'를 설립하고, 월 1회 이상의 네트워킹 행사와 분기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VR/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협업 공간'도 구축, 청년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청년 아트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매년 일정 수의 젊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와 협력해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 공간과 연계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동구를 젊은 예술

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청년 발전 기금' 조성, '청년 혁신 기금' 펀드 조성, 고향사랑 기부금의 일부를 청년 문화 예술 지원에 배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중심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도 감안해야 한다. 세대 간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 공감 프로그램' 도입,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청년정책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 '전 세대 균형 발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동구의 발전은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체적 정책과 실천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특히 AI, 빅데이터,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은 청년 정책의 독보적인 강점이 될 것이다. 동구의 청년 정책은 AI와 문화 예술을 접목한 독특한 지원 정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하다.

이처럼 다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혁신적 변화를 당당히 이끌어내야 한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는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다.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들의 노력이 내일의 희망으로 꽃피우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社說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양부남(광주 서구) 의원과 강위원(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진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양 의원은 "어려운 정치 현실과 민생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이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회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 등 당원·현장·사람 중심 운영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강 상임대표는 출마 이유를 "4기 민주정부로 정권 교체를 위한 '집권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서"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당원과 시민의 공론을 모아 스스로 공천방식을 결정해 제대로 된 '주민의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진명(진이재명)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후보 모두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중이다.

광역·기초의원 공천뿐만 아니라, 단체장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원외 인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원내 국회의원과 맞붙는 만큼 전국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광주 지역구 8명의 단일 후보여서 정치력의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이다. 이래저래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물론 지방선거는 2027년 3월 예정인 10대 대선의 전초전이다. 민주당에서 호남의 지분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텃밭으로 입지는 탄탄하다. 광주는 심장부 역할을 또 그렇게 담당하고,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키맨으로 가능할 것이다.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관리당원 ARS 투표와 800여명의 대의원 현장 투표를 거쳐 8월4일 선출되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단순한 경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을 끈다. 과연 누가 선택받는지 그 시간이다가오고 있다.

전남도 추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특별법 제정 기대

전남도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 첨단산업 지구에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도입 전략을 발표했지만 자경농에 한해 농업지역 밖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ha 이하 소규모이며 집적화를 위한 대단위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전남으로선 미흡할 수밖에 없다. 특별법은 대단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 지원,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했다. 집적화지구는 첨단산업 유치, 미래산업 특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RE(Renewable Energy)100은 2050년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설비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기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IDC) 운영에는 필수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기업들도 잇따라 참여하는 모습으로 국제 표준이 됐다.

전남은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80.9%를 차지한다.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림부의 도입 전략은 연계가 분명하다. 집적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조와 제도적 지원 기반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전남도는 올해 초 특별법안을 마련해 2개 시·군, 대학, 관련 협회·기관 및 국회의원 등의 자문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마무리해 공식 건의하며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RE100 수요 기업 유치를 위한 전남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 제정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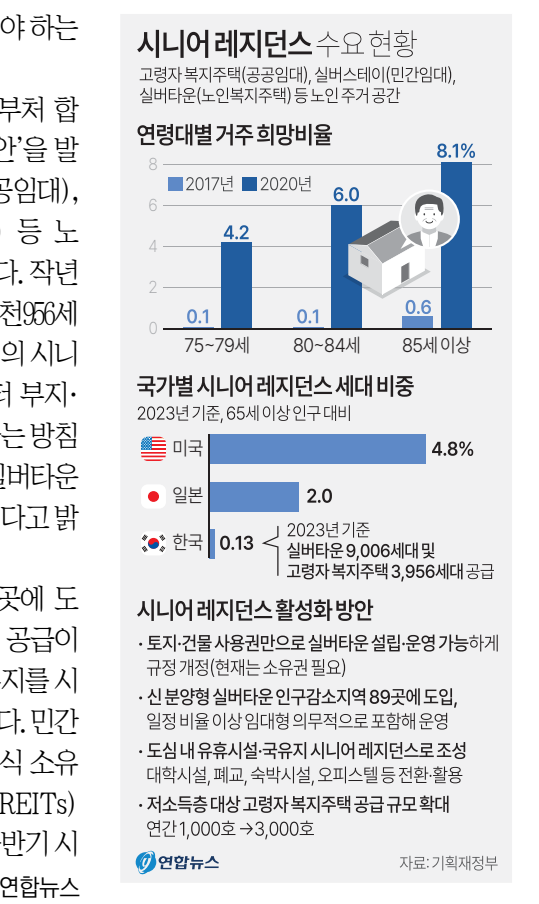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범상 개념은 아니다. 작년 까지 누적 실버타운은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6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버스테이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최고의 투자 종목은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10년간(2014~2023년)의 전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인데 비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절반가량인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비중이 높은 이유는 화재가 주로 심야 취약 시간대(오전 12~오후 6시)에 발생해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실령 인지를 했더라도 초기 소화가 가능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된 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5%,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실제 사례로 입증된다. 얼마 전 통영의 한 가정집 태양광 설비에 불이 붙었으나 주민이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한데 이어 논산에서도 주택 냉동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초동 대처에

큰 도움이 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불과 3만원 정도의 투자로 하루로부터 소중한 여러분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고의 투자 종목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기 바란다. 이 투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개원·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 소방경)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